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사례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Migration of the Local Talents from Region to Metropolitan Area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배 지 혜, 이 영 민*

경북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Bae Ji-Hye, Lee Young-M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역인재의 균형적 육성은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구광역시에 서울의 K대학교로 진학한 20대~40대의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기획·실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체감도 및 효과성과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지역인재 양성 차원과 활용 차원, 인프라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RHRD) 운영 개선 및 조례제정, 지역주민참여 등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 서론

학령인구(6~22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수록 생산력과 소비 역시 감소되므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된다. 이는 다시 투자위축과 소득감소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해갈수록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된다. 지역의 선별성과 이동 인구의 선별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이동은 지역 간 인적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¹⁾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현상과 인식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선행연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원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이다. 지역인재의 경쟁력은 곧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와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철, 이민환(2003)은 성적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대학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저하를 초래²⁾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김승택, 김재원(2008)이 우려한 것처럼 저개발 지역은 숙련노동력을 잃고 사양 지역으로, 나아가서는 회생 불가능한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한편, 집중 지역은 환경파괴와 혼잡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³⁾.

2. 분석틀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과 구조적 면접(structured interview)의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교육통계(KEDI)와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청(KOSTAT), 한국고용정보원(KEIS)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실태와 소재지별 취업인식 등을 분석했다. 둘째, 지역인재유출 및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 및 효과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 US News & World Report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2위를 차지한 서울의 K대학교를 모집단으로 삼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대구교우회 연락망을 활용하여 면접대상자를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으며 위신향상효과, 체면치레효과, 동조효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설문이 아닌 면접설문의 방법을 택하였다. 유의표집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우려되나, 미시적 현상 분석을 통해 거시적 수준의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I. 현황분석

1. 대구지역 인적자원 현황

2015년 2월 기준 대구의 총 인구는 2,492,583명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는 74.1%:12.3%이다. 노년인구는 2012년 이후 해마다 평균 15,000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는 반대로 평균 8,000명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적 고용의 안정성은 오히려 경상권 대학 출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에 대한 비교 측면에서는 서울권 대학 출신에서 높음과 매우 높음을 선택한 비율이 11.5%였는데 반해, 경상권에서는 9.5%로 2% 낮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업무 만족도 면에서는 서울권의 모든 수치가 경상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사회적 평판은 다른 요인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2. 대구출신 K대생의 인식 고찰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K대학교로 진학한 20대~40대의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 결과, 졸업 이후 진로 중 '대구에서의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등의 선택지에 한 명도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착지를 서울 및 수도권으로 선택한 이유에서는 70%가 '지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학금이 주어졌다면 출신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했을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80%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취업이 보장되었다면 출신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20%,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가 각각 10%씩으로 나타났다.

'내가 출신지역의 대학에 진학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진술에는 70%가 반대했으며, '언젠가는 고향에서 거주할 것이다'라는 진술에는 50%가 찬성했다.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에 B씨는 '취업이 된다면'이라고 답변하였으며, C씨 포함 5명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D씨, E씨, I씨는 '나의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귀하의 출신지역인 대구에 대한 견해'를 선택지 중에 고르는 질문에서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발전전망이 미약하다'와 '고향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내 발전을 위해 떠나고 싶다'가 각각 50%씩으로 선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지역인재유출현상은 '인적자원의 고갈을 유발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는데도 어려움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정체화되고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 부정적 현상은 대학의 차원에서 마친가이다. 대학들은 자체적 생존을 위해 중앙지역으로의 이전을 택하고 있는데, 지식의 창출과 활용 등 지식활동을 담당하는 대학이 거점지역을 떠난다면 지역 내 지적자본의 약화는 명약관화이다. 지역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의 개선점을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 차원과 활용 차원, 인프라 차원에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 차원

지역인재양성 방안은 고등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준에서부터의 인재발굴과 진로지도 교육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교과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정된 교육시수를 활용하여 중·고등교육을 통해 축적된 생산력이 평생의 노동소득과 연결된다는 교육투자효율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출신대학의 명성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인식과 지역소재 대학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 금전적 보상과 취업 및 대학원 진학에 대한 보장이 지역정착에 대한 유인가로 작용하지 못하는 기저에는 공동체 정신과 애향심의 고갈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인재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 교육부는 2015년 1월 22일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지방인재 장학금'의 규모를 증대한다고 발표하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 각종 지역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정책실행의 체감도와 효과성 향상이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2 지역인재활용 차원

지역인재의 활용은 크게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무원 임용 시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장학금보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유인가로 작용했던 점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청년들의 난관인 취업문제와 이직에 대한 고민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1월 고용노동부의 지역특화사업에 대구시의 안정사업이 선정된 경험을 비추어 지역 내 특화된 산업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를 개편한다면,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인재가 정착하여 창업 혹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우수성을 발휘하고 또다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면, 이는 다시 지역대학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4년의 국책지원 공대사업을 시작으로 현재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절차의 투명성과 사업 결과의 양적 질적 분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1.3 인프라 구축

대구의 RHRD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인재개발센터에서 담당한다. 미국의 지역 HRD의 주 인력개발위원회의 구성원이 고용주, 노동자, 교육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HRD의 구성원에도 산학관민의 다자간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RHRD의 업무를 확대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적 인재상의 숙성을 충족시키는 숨은 인재를 다양한 통로로 선발하고 지역대학 시설에서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의 발굴에서 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윈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삶을 지역에서 동등하게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의 작간접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다.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을 조성하여 인재유출을 막겠다는 시장의 의지도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무의미한 투자에 불과해진다. 그러므로 지역사업 읍부즈만과 같은 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제공의 권리를 적극 행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인프라 구축의 주체로 앞장서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박우식, 박상우, & 엄창욱. (2011).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산업경제연구, 24(4), 2247-2274
- [2] 김영철, & 이민환. (2003).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 효과. 지역연구, 19(2), 119-141.
- [3] 김승택, & 김재원. (2008).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6(1), 47-56.
- [4] 장영재, & 임정덕.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勞動經濟論集, 20(1), 91-115.
- [5] 신현석, 반상진, 변기용, 이은구, & 주휘정. (2011).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教育政治學研究, 18(2), 205-234.